

빅데이터를 이용한 '민생회복지원금' 정책 신뢰도 분석

- 추경 편성에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-

권 승 근 | 선임연구원
Kwon Seung Keun | Research Associate

2025.04.02



I. 연구 배경 및 목적

- ‘민생회복지원금’ 이슈는 최근 1년간 야당 대표 발언에 따라 우왕좌왕해오다가 결국 민주당 추경안(2025.02.13)에 포함
 - 전 국민 현금살포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재정원칙을 정면으로 위배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만듦으로써 인기를 얻고 정치적 이득을 피하려는 의도로 활용
- 이런 포퓰리즘적 접근이 의도된 정치적 과실을 가져올 것인지는 정책 합리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렸음
 - 야당 대표의 입장이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것 역시 국민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, 정치적 득실이 어떨지 등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
 - 국민의 실제 반응이 ‘누구나 돈 받으면 좋아한다’는 통념과 달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한다면,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
- 본 보고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‘민생회복지원금’ 이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
 - 정치권 논쟁과 언론보도 속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감성적 반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량·정성적으로 분석

II. ‘민생회복지원금’ 이슈의 정치적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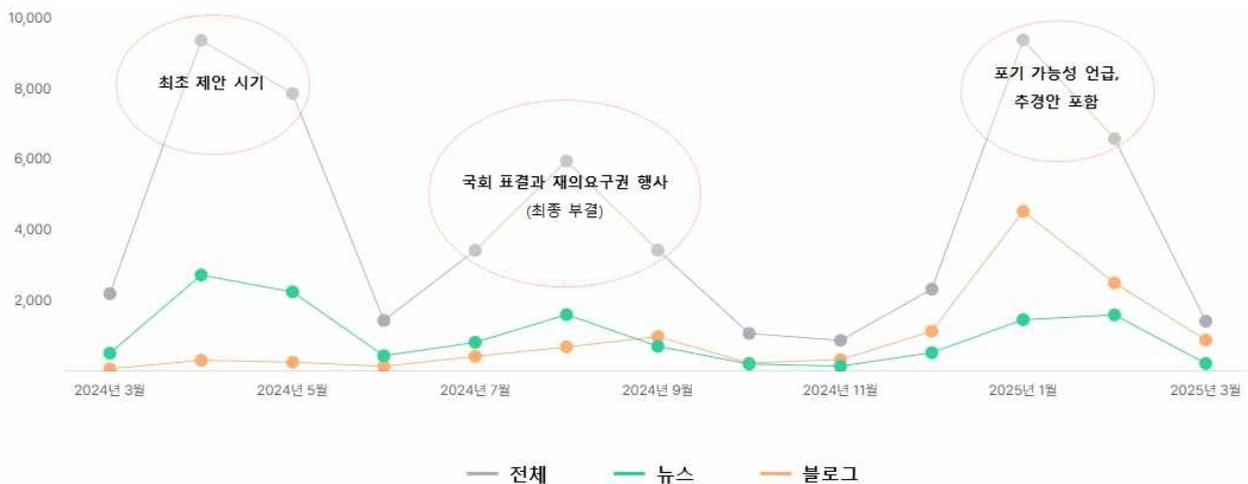
- ‘민생회복지원금’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이후, 관련 논쟁이 현재까지 이어짐
 -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브랜드 사업인 ‘기본소득’과 유사
 - 추경 논의가 시작되던 시점에 정책 ‘포기’를 언급하며 번복됐다가, 이후 재번복돼 현재는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으로 추경에 포함

「민생회복지원금」 이슈 타임라인



- 화제가 되었던 시점은 크게 3회{①최초 제안 시기, ②국회 표결과 재의요구권 행사, ③포기 가능성 언급(번복), 추경안 포함(재번복)}

「민생회복지원금」 온라인 여론 빈도 추이



* 참조: 썬트렌드 온라인 버즈량(생산된 콘텐츠의 양) 기준(게시물 생성 건수)

III. 빅데이터를 이용한 긍·부정 여론 분석

□ '민생회복지원금' 이슈는 초기 논의 시점부터 부정적 여론이 우세

- '법안 통과'와 '거부권(재의요구권) 행사' 시점을 구분해 감성 분석*한 결과, 정책에 대한 여론은 초반부터 부정적이었고,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반응

- '전 국민 25만원 지원법' 국회 통과에 대한 반응은 '망하다' 등 **부정** 감성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, '좋다'라는 긍정 감성어가 언급량 기준 16위에 가서야 처음 등장
- 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**긍정적** 반응으로, 긍정 감성어인 '잘하다'와 '지지하다'가 각각 2위와 6위에 위치
- 샘플 여론조사인 갤럽조사(2024.05.24.)에서도 찬성:반대가 43:51로, 정책에 대한 여론 반응이 초반부터 **부정적**

(긍정: ■, 부정: ■, 중립: ■)

Youtube 댓글의 감성 연관어 분석 결과 비교

순위	연관어	감성	순위	연관어	감성
1	받지않다	■	1	거부하다	■
2	힘들다	■	2	잘하다	■
3	안되다	■	3	아깝다	■
4	망하다	■	4	안되다	■
5	반대하다	■	5	개탄스럽다	■
6	주지않다	■	6	지지하다	■
7	아깝다	■	7	부족하다	■
8	싫다	■	8	못하다	■
'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' 반응 2024.08.02. 연합뉴스(Youtube)			'尹 거부권 행사' 반응 2024.08.16. YTN(Youtube)		

※ 감성 분석(Sentiment Analysis)

감성 분석은 자연어 처리(NLP)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가 내포하는 주관적 감정(긍정, 부정, 중립)을 판별하고 구조화하는 기법

- 정성적 데이터인 댓글, 기사, 인터뷰 등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 정량화하며,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문맥과 뉘앙스까지 감안할 정도로 정밀도가 향상
- 해당 이슈에 관한 시계열/사건별 추적 및 이상 징후 감지 등 대중의 반응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며, 분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연관어 등을 통해 호감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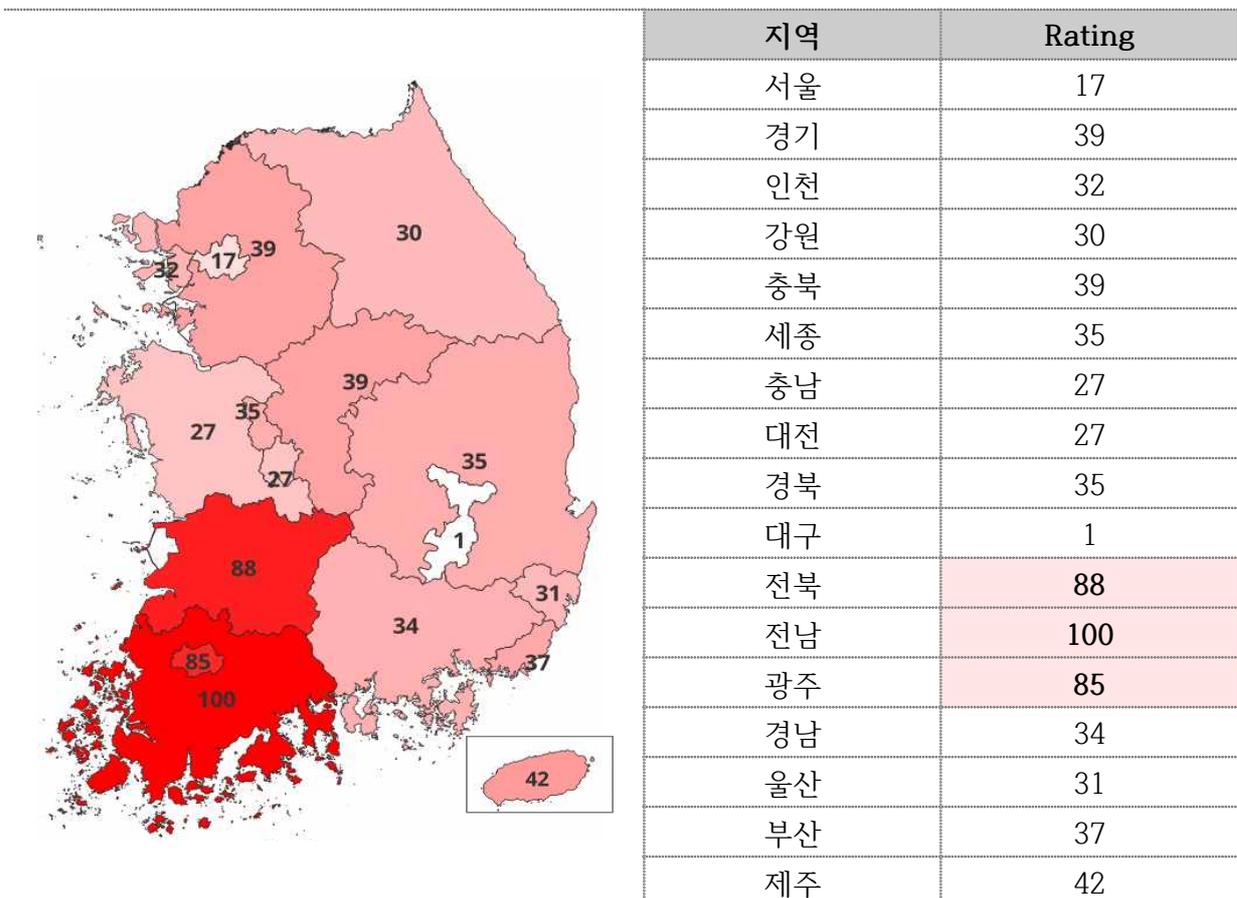
□ 지역별 검색량에서는 호남 지역에 한해서만 관심도가 높아 다른 지역과 극명한 차이를 보임

○ 시/도 단위의 지역별 검색 빈도를 비교한 결과, 전남(100), 전북(88), 광주(85), 순으로 호남 지역에 한해 매우 높은 검색량을 보였을 뿐,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40 미만이며 서울은 17에 불과

- 구글트렌드의 지역별 검색량은 특정 키워드가 해당 지역 내에서 전체 검색 중 차지하는 비율을 기반으로, 지역 간 상대적 관심도를 0~100 지수로 환산한 값

○ 전 국민이 수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,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 정치적·이념적 선호를 반영한다고 판단됨

지역별 「민생회복지원금」 이슈 관심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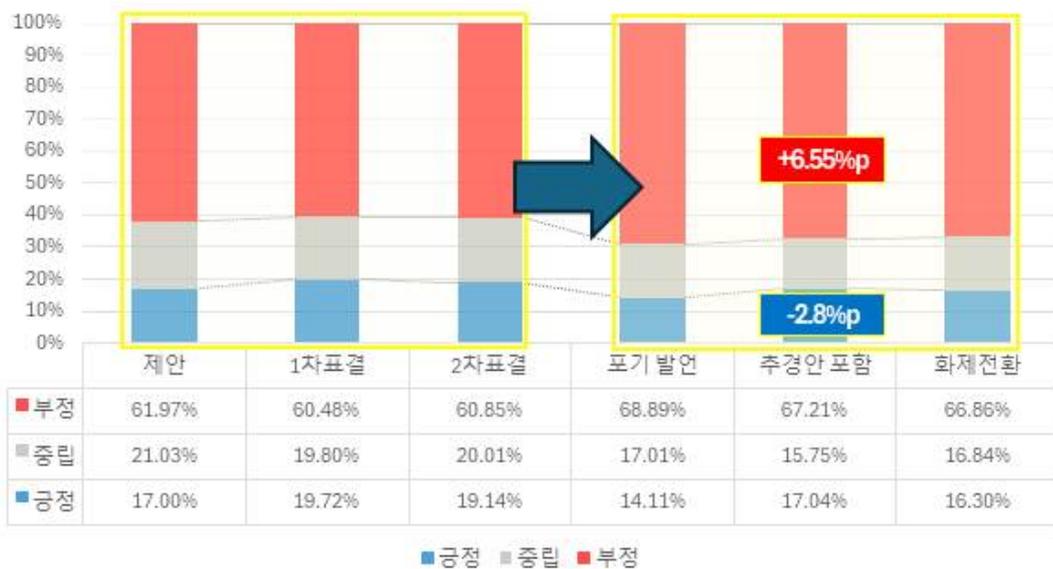
* 구글트렌드 활용(2025.01.~2025.02.)

IV. 정치적 번복에 따른 정책 신뢰도 변화

□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번복한 시점에 “**긍정 감소, 부정 증가**”로 여론이 악화

- ‘포기’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시점 전후를 분리해 감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, 긍정 값은 감소하고 부정 값은 증가

「민생회복지원금」 포털사이트 댓글 감성 추이



* 감성 분석의 결과는 긍정/부정/중립 비율의 절대적 수치보다 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

- 이재명 대표의 ‘포기 발언’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감성 수치는 **긍정 값이 감소(-2.8%p)**하고 **부정 값이 증가(+6.55%p)**
- 감성분석에 활용한 단어 수가 시점별 약 5만개로, ‘포기’ 발언 직후 **평균적으로 긍정 감성어는 약 1,400건 감소**하고, **부정 감성어는 약 3,300건 증가**
- 이러한 변화는 입장이 번복됐을 때 ‘민생회복지원금’에 관한 인식이 초반보다 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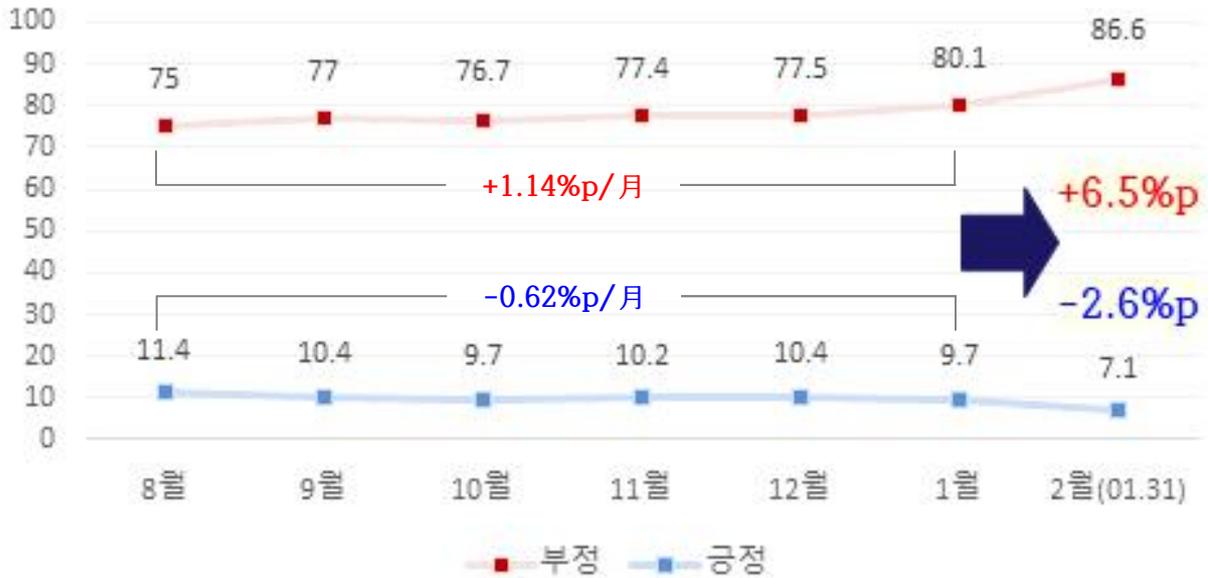
□ Youtube를 이용한 감성 분석에서도 **부정적으로** 인식이 변화하는 흐름이 동일하게 관찰

- 유튜브는 매체 이용자의 성/연령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르다는 점에서 포털사이트 분석을 보완할 수 있음¹⁾

1) 한광범 기자. (2024년6월2일). “네이버 뉴스 댓글, 누가 쓰나 봤더니...10개중 6개 ‘4060 남성’”. *이데일리*. <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mediaCodeNo=257&newsId=01354646638917784>

- ‘포기 발언(번복)’과 ‘추경안 포함 발언(재번복)’이 있었던 25년 2월, **긍정 값 감소(-1.53%p)**와 **부정 값 증가(+5.3%p)**가 두드러짐

「민생회복지원금」 Youtube 댓글 감성 추이 (2024.08. ~ 2025.02.)



- 이재명 대표의 입장 번복 이후 급격하게 **긍정 감소(-2.6%p)**, **부정 증가(+6.5%p)**가 나타났으며, 이는 번복 이전 시기 월 평균 변화량(-0.62%p, +1.14%p)에 비해 약 **4배, 6배** 수준

- ‘물가’, ‘포퓰리즘’이 연관어 분석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, 이는 ‘민생회복지원금’ 과 함께 가장 먼저 연상되는 상징이자 부정적 여론의 주된 이유로 해석

□ 비슷한 시기 샘플 여론조사(한국갤럽, 2024.05.24., 2025.02.21.)에서도 번복 전후로 **긍정 응답이 감소, 부정 응답이 증가하는 비슷한 결과가 확인됨**

- [1차→2차] 전체 결과, ‘**긍정**’ 응답은 **감소(-9%p)**하고 ‘**부정, 중립**’(+4%p, +5%p) 응답은 **증가**

-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차 조사에서부터 부정적 반응이 많았으며, 2차 조사에서 더 강화
- 유독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던 40~50대마저 2차에서는 부정 응답이 긍정을 넘어서는 결과

[여론조사]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

구분	“지급해야” vs. “지급 안 해야”			
전체	43% vs. 51% ⇔ 34%(-9p) vs. 55%(+4p)			
연령별	• 18세~20대	45% vs. 44%	⇔	30%(-15p) vs. 48%(+4p)
	• 30대	33% vs. 56%	⇔	31%(-2p) vs. 60%(+4p)
	• 40대	51% vs. 45%	⇔	43%(-8p) vs. 48%(+3p)
	• 50대	51% vs. 45%	⇔	40%(-11p) vs. 51%(+6p)
	• 60대	34% vs. 61%	⇔	32%(-2p) vs. 63%(+2p)
	• 70대 이상	38% vs. 58%	⇔	26%(-12p) vs. 63%(+5p)
지역별	• 수도권	43.5% vs. 49%	⇔	34.5%(-9p) vs. 53.5%(+4.5p)
	• 호남(광주, 전라)	57% vs. 37%	⇔	57%(0p) vs. 36%(-1p)
지지정당별	• 더불어민주당	68% vs. 26%	⇔	62%(-6p) vs. 25%(-1p)
	• 국민의힘	16% vs. 79%	⇔	6%(-10p) vs. 90%(+11p)
	• 무당층	37% vs. 50%	⇔	21%(-16p) vs. 58%(+8p)

* 참조: 한국갤럽조사연구소,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84호, 612호

- 호남지역과 민주당지지 응답자만 여전히 “지급해야”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책의 지지가 정치적 충성도에 의존함을 시사
 - 모든 지역에서 긍정 응답은 감소하고 부정 응답은 증가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, 호남지역에서만 1·2차 조사 사이에 변화가 미미
 - 국민의힘 지지나 무당층 응답에서 긍정 응답이 감소하고 부정·중립 응답이 증가한 것과 달리,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은 여전히 높은 비율로 찬성 지속

V. 시사점

- ‘민생회복지원금’ 정책은 초기 제안부터 전반적인 반응이 일관되게 부정적이었으며,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반복 시점에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
- 현금을 받으면 무조건 좋아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, 정책 합리성과 재정배분 원칙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정책은 냉정한 평가에 직면

- 감성 분석과 여론조사 모두 입장 번복 이후 부정적 반응이 확대된 것은 ‘정치적 진정성’에 대한 의구심 증가로 해석
 - 금전적 혜택을 뿌려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
- 특정층에만 집중된 관심과 호감도는 이 정책의 본질이 지지층 확산을 꾀한 단순 포퓰리즘이 아니라, 핵심 지지층에 대한 보은이자 패거리 정치를 강화하는 ‘교조적 포퓰리즘’임을 시사
- 정책의 관심도가 호남지역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만 집중돼 강한 편재성을 보이며, 호감도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적 충성도를 대변
 - 전 국민으로부터 재원을 걷어 특정 그룹이 원하는 정책에 지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, 다수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뿐더러 복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한다고 보기 어려움
 - 특정 정치세력이 줄곧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강하게 호응하고, 그 충성층 선호에 다시 정당이 화답함으로써 정치진영을 강화시키는 쳇바퀴 구조
- 산불 피해자 구호와 복구를 위해 한시가 바쁜 추경 편성이 이런 정치적 지출을 둘러싼 논쟁 때문에 지연돼서도 안 되며 재원이 정치적 의도로 낭비돼서도 안 됨
- ‘발등의 불’ 추경이라 불릴 만큼 산불 피해로 인한 지출이 ‘긴급하게’ 필요한 상황
 - 역대 최악의 규모로 발생한 인명·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예산편성 절실
 -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정당 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필수적 항목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
 - 시급을 다투는 현안 앞에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과 같은 정쟁적 이슈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재원을 낭비한다면, 정치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들을 또 한 번 희생시키는 것과 같음